

Special Report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March 10, 2022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선거 후 1일 차에는 전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 정리 및 향후 인수위 구성부터 취임일까지의 주요 일정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결정되면 각 분야별 정책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제20대 대선 결과 및 시사점	3
II. 새 정부 출범 시까지의 주요 일정	5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1. 기업지배구조 / 중소 중견기업	7
2. 노동(중대재해)	9
3. 공정거래	12
4. ICT	14
5. 헬스케어	17
6. 자동차·모빌리티	20
7. 환경	21
8. 소비재·유통	23
9. ESG	23
10. 금융	24
11. 부동산·건설	26
12. 프로젝트·에너지	29
13. 국제통상	30
14. 형사	32
15. 조세	34
16. 가상자산	36

I. 제20대 대선 결과 및 시사점

대선 결과 요약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6%의 득표율을 기록, 4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p, 약 25만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적은 득표 차로,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당선인이 이회창 후보를 39만표(1.53%) 차이로 승리한 기록을 경신할 만큼 치열한 초접전이었습니다.

한편,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서울 종로 등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 4곳 모두 승리하여 국민의힘 의석은 106석에서 11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국정운영 전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선불리 가늠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협치’와 ‘통합’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300석 중 110석에 불과하여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등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안은 물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임명이 늦춰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내각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처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이념’, ‘중도실용’ 노선에 기반한 국정운영도 예상됩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이후 발표한 선언문에서도 “국민통합정부는 ‘실용 정부’”라며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정책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큼니다.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이후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그 양쪽에서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잠재성장률을 4% 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장했고, “정부 중심의 성장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옮겨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철수 대표 역시 벤처기업가 출신으로서 그동안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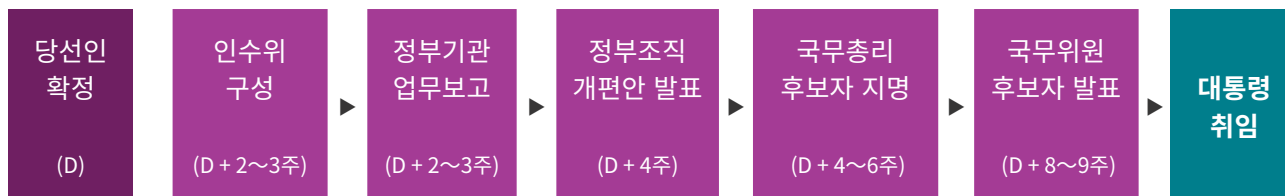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 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한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국 전망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까지 2년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냐, 強대強 대결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패배했지만, 역대 최소 득표 차라는 명분과 172석의 압도적 국회 의석을 무기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전에는 입법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론을 살피며 신중을 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교체 이후에는 주요 관심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때까지 정치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 새 정부 출범 시까지의 주요 일정

[대통령 선거 이후 주요 일정 개관]



당선인 확정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일까지 새 정부 5년 간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을 담당하는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더욱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향후 큰 폭의 정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에 구성¹ 되는 이번 인수위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 및 활동: 인수위는 당선인 확정 이후 통상 2~3주 뒤에 구성되며, 약 두 달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거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전례처럼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다만,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교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따른 공동운영 기조 역시 향후 인수위의 구성 및 활동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의 핵심 역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구체화하여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디지털금융 혁신,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정, 임금체계 개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분야 외 제반 공약사항들에 대한 실행계획 방안도 인수위를 거치며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새 정부의 운용방안에 관한 밑그림이 드러나는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도 인수위의 주요 역할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디지털혁신부 설립, 항공우주청 신설 등을 약속했으며, 그 외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 등의 기능 조정,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부처의 개편 내지 업무 재조정 역시도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여성가족부 해체’에 다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 현 여권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조직 개편은 향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같음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지명: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도 이뤄지며, 인수위는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검증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총리, 장관을 미리 인선하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새 대통령의 매끄러운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인준 및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향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안철수 후보와의 공동정부 구성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참고) 최근 대통령 선거 이후 주요 일정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일	2007. 12. 19.	2012. 12. 19.	2017. 5. 9.
인수위원회 출범	2007. 12. 26.	2013. 1. 6.	2017. 5. 22.
정부부처 업무보고	2008. 1. 2. ~	2013. 1. 11. ~	2017. 5. 24. ~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2008. 1. 16.	2013. 1. 15.	2017. 5. 24.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2008. 1. 28.	2013. 2. 8.	2017. 5. 10.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2008. 2. 18.	2013. 2. 13.	2017. 5. 21.
대통령 취임	2008. 2. 25.	2013. 2. 25.	2017. 5. 10.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 중소기업

1. 주요 공약사항

◆ 중견·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평가해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3년 유예기간 확대 적용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 자금조달 위한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 맞춤형 혁신 전문인력 제도 도입,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수출 이전 단계(수출품 선적 전후) 무역금융보증 지원 확대
- 수출대금 미지급 피해보상 확대,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사후관리 의무기간 및 사후요건 등 완화
 -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 계획적 승계 지원 위한 사전증여제도 개선

◆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 중소·중견기업 디지털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 공장 자동화, E-커머스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 디지털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급/확산 지원
- 미래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예산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우대금리 적용, 융자지원규모 확대
 - 로봇/센서 등 핵심 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 노후산단 공동화 지역, 정부/지자체 지원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 중소기업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이동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 관련 필수 기기 구입 시 세제 지원

◆ 기업관련법 정비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경제적 공동 관계의 부존재 증명 시 예외 인정 등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2. 시사점

새 정부의 대선공약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존 주주들의 권익 보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한 세제와 금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자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개정 및 제정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이러한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A관련: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된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M&A 거래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몇몇 기업집단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신기술조합과 같은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그 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신기술조합에도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기업관련법 정비: 기업관련법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논의되던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각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개념은 적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변경한다면 기업 실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예상됩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존에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논의되었고,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시장(NYSE)에 상장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이 아니라 1주당 수개 또는 수십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창업자에게 이러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 유치 속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노동(중대재해)

1. 주요 공약사항

◆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개편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채용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원천 무효화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 일하는 부모 위한 근로제도 개선

- 육아 재택근무 도입,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실질적 보장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2년→3년),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난임 휴가 기간(3일→7일) 확대

◆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저축계좌 적립 초과근로시간 휴가 사용,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 전환
- 정규직 유지 조건 풀타임 및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 전일제근로 및 시간제 등 근로전환 신청권 부여,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 연장근로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 상생노사관계 발전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노사관계 전문가 조정담당 상임위원 임명, 노사갈등 조정능력 제고

-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 설치, 갈등 장기화 예방
-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직접투표 선출, 독립성·대표성 강화
 -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 참여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마련, 원활한 노조 활동 보장
 -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검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 적용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
-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으로 워라밸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 기존 시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 개선
 -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료하게 정한 새로운 근로 유형 보급

◆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채용부터 퇴직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근로공시제 참여기업 순차적 확대)

◆ 산업재해 취약부문 예방 강화

-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대한 행정역량 집중
 - 대기업 기술 및 노하우 활용, 하청업체 안전수준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
-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2. 시사점

노동 분야 공약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노동개혁’, ‘공정사회’라는 주제 하에 **민간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 차별 근로시간 등에서의 공정성 유연성 확대**를 주된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우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주 52시간근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전문직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신설,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등도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며,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시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입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관련: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특히 채용 분야에서 공정한 채용 내용과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모든 노동자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면서 유연한 훈련체계 도입 등을 통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결정방식 개편,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화된 내용이 공약집에 담기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될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한 기업 간담회(창원, '22. 1. 14.)에서 ‘관련 시행령과 형사집행의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병수당 도입’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상계 등 제도적 개편사항과 연계될 수 있어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공약으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조로 장기분쟁전담위원회 설치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직접투표제,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윤석열)과 국민의당(안철수) 후보단일화에 따라 서로 다른 공약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은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하였고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 바, 해당 공약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한 사용사유제한 방식 변경 등의 채택 여부도 주목됩니다.

전반적으로 노동 공약의 기조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성과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사관계 관련 내용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고 국민의당의 공약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1. 주요 공약사항

◆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을의 피해 신속/실질 구제

-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
-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사전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 효율적 운영
-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자율 규제 원칙, 필요 시 최소 규제

◆ 납품단가 제도 개선

-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중 원자재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약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협협상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및 상생 촉진

- 선부른 규제도입 지양. 이해관계자의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 마련.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간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정에 정부 적극 참여

◆ 플랫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이용사업자 정당한 권리 보호

-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2. 시사점

새 정부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보다는 **현행 제도의 집행**에 좀 더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플랫폼 경제체제 심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도급, 유통거래 등 **전통적 甲乙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甲乙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甲乙관계 관련: 먼저 甲乙관계 관련 공약사항들이 현실화되면, 대중·소기업 간 거래대금 결정 및 조정 구조에 있어서 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협상력(지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화 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제도의 입법화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법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이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관련 민원제기 및 신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약 초기부터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협력체계(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준수)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한편으로 새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적인 법 위반 예방 노력과 함께 실제 분쟁 발생시 각종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법률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고발)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 7월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이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가 본격 시행되므로, 동의의결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탈취(유용) 법집행 강화: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관련 조직체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니다. 참고로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개설(22.3.3.)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특성, 부처 및 관련 업계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 그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틀의 구축은 시기와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플랫폼 관련 규제 대상 사업자들은 스스로 불공정거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이용사업자(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제: 기업집단 계열회사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축소)이 실현될 경우, 관리 대상 친족 및 계열회사 범위가 줄어들어 기업 부담도 그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관리 책임 즉, 새로운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친족 및 계열회사 관리 소홀(누락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고발권: 새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폐지되는 경우보다 기업들의 사법적 부담(형사 고발)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 공약의 취지를 살펴보면 단순 현상유지가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 즉, 공정위의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 유도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고발결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CT

1. 주요 공약사항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AI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메타버스 활용 훈련체계 구축

◆ AI 교육혁명 인재 육성

- 초등학교 코딩교육 및 초/중등 교육과정 AI교육 필수화, 대학 기초과목 AI튜터링 도입,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 에듀테크 교육

◆ 초격차/초연결/AI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디지털(AI 등)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 집중 투자 및 민간 투자 적극 유도
-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 빅데이터/블록체인 융합 5G/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
 - 5G 전국 개통 추진, 6G 기술 선점,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구축,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 5대 메가테크 육성
 -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등), 양자, AI반도체/로봇 등

◆ 디지털 지구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산업 새로운 도약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공공 IT 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5조 원 → 10조 원)
-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5G MEC 기술 적극 육성, 공공 분야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AI 반도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등 기술혁신 유도
 -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및 AI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 설비투자 적극 유도
-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및 기술 혁신 위한 법제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 초격차 리얼 디지털인프라 산업 육성

◆ 메타버스 지원

- 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체계 마련
 -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및 상생 촉진

- 선부른 규제도입 지양. 이해관계자의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 마련 -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 정부 적극 참여

◆ 플랫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이용사업자 정당한 권리 보호

-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2. 시사점

ICT 분야 공약은 1)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달성, 2)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3)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ICT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한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의 대부분은 진흥과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공약은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 위한 제도/규제 도입: ICT 및 미디어 분야에서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공정한 대가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국내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며,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대가 배분 등 공정하고 상생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 새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 및 미디어 산업의 공적 가치 제고와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방송 미디어 분야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은 향후 방송의 공-민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와 규제체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인수위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과 이를 논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및 OTT 시장이 새 정부에서 진흥정책이든, 규제정책이든 정책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1. 주요 공약사항

◆ 바이오헬스 분야 5대 메가테크로 육성

◆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

-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 유전자통합제어 기술 및 산업 지원
 - 유전자통합제어 기술 활용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
 -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 추진

◆ 세대/대상별 헬스케어 복지 확대

- 영유아/청소년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 5세 미만 영유아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 발달장애 의심 아동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 청소년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 포함(자궁경부암 세포진, HPV, 난소건강 등), 15세부터 모든 여성 적용
 - 남성도 청소년(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
- 부모
 -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노인
 -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 장애인
 -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 보훈가족

—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보훈위탁병원 전국 병/의원급 대폭 확대

◆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첨단의료분야(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및 바이오 디지털분야에 국가 R&D 확대

◆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비용 부담 경감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

- 재활로봇 활용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 건강보험 적용
- 재활로봇 관련분야 연구 및 산업 지원 강화

◆ 활력 넘치고 품격 있는 노후

-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인공와우 수술 지원

2. 시사점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계획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확대: 새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공약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의료수가 상향 및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가다실 9 가 접종 비용 지원,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 등 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상품화 및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등재 및 보상 확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재정 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의 1차적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고, 이와 함께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하여는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과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및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 새 정부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 산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원격 의료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헬스케어, ICT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원격 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에 대한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지원 확대: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하며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 및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 및 R&D 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모빌리티

1. 주요 공약사항

◆ 디지털 지구 시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등 기술혁신 유도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 수출 지원
 -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먹거리산업 육성

-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
 - 데이터, 모바일, 초고속이동통신 제어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 4차산업혁명화 지원 및 고용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확충, 신산업 전환 지원 및 규제 폐지

◆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지 시한 3년 단축
 - 2025년 EURO7 도입, 미세먼지 발생 저감

◆ 교통 플랫폼 혁신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 수도권 항공모빌리티(UAM) 테스트베드에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 교통 핵심 지점 중심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및 복합환승체계 도입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 전기자동차 시대 선도하도록, 규제 해소하고 관련 산업 진흥

-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 포함
-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 완화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2. 시사점

자동차·모빌리티 분야 공약은 대체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각 부처는 법령 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금년 상반기

중 제정 완료를 목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UAM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위 조치들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법 시행시 **규제 특례 조치를 받기 위한 규제 확인, 규제 특례 신청, 기한 연장 및 법령정비 요청** 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은 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벌칙 신설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내연기관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은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 중단(모델 개발 중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됨) 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될 수 있는바, 일자리, 부품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갈등 또는 분쟁이 예상됩니다.

환경

1. 주요 공약사항

◆ 청정에너지 탑3 기술강국 실현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 집중 육성
 -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업 육성
 - AI와 에너지융합 육성

◆ 탄소중립 적극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 거쳐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도입 신중 추진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 산업계/학계/정부 ‘기후위기 대책기구’ 조성
 - 산업계 현실 반영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 노후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의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전환 지원

- 저탄소 사업 구조 전환 지원 강화 및 근로자 지원시스템 마련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 60%대에서 40%대로 감축
 - 자발적협약(VA) 운영 의무화, 권역별 할당량 50% 이상 축소
 - 고농도 발생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동상한 현재 80%에서 50%로 조정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2035년),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지 시한 3년 단축
 - EURO7 도입(2025년), 미세먼지 발생 저감

◆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는 축산업 구축
 -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확대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도입
 - 저탄소사료와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보급

◆ 쓰레기 처리 방식의 열분해 방식으로의 전환

- 플라스틱, 일회용품 포장재 쓰레기 발생 감축
 - 제품제조단계에서의 단일재질화, 일회용품 사용 및 발생 저감

2. 시사점

탄소중립 목표 유지,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탄소저감 R&D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NDC 달성 방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정에너지 사용 및 원자력발전과의 조화를 통해 재편될 것이므로 산업별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가 미칠 직접적, 간접적 영향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벤처, 탄소 저감 기술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모색과 국제적 트렌드와 맞물려 ESG 경영 도입, 공시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감량,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축소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고 원부자재 사용 및 폐기물 위탁처리 장소 및 방법의 변경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비재·유통

1. 주요 공약사항

◆ 안전 먹거리 제공 및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
 - GMO완전표시제 도입,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 수입 농수산물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유통이력추적제의 정착화
 -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 밀키트, 메디푸드 등 개발 및 보급
 -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규제 완화 추진
 - 전통식품산업 진흥정책을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2. 시사점

먹거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미래 식품산업과 관련한 검사 방법 및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사항은 공약의 내용만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기존 정부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에 대하여 추후 마련될 정책 및 입법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SG

1. 주요 공약사항

◆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의 ESG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ESG 평가지표 표준화 추진
 - ESG 지표 활용한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기업 협력, 중소/벤처기업 등에 ESG 경영역량과 기술협력 추진
 - ESG관련 다양한 대/중소/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탄소중립 적극 추진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환경 공약 중복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 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환경 공약 중복지)

- 산업계/학계/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조성
 -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입법 예산 인력 분야의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 지원
 - 저탄소 사업 구조로 전환 지원 강화 및 근로자 지원시스템 마련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 수립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 시사점

ESG 관련한 공약은 ESG 경영 관련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등 ESG의 국가적 이행 관련하여서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조세 등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정에서 의견 반영이 미흡하였던 산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

1. 주요 공약사항

◆ 디지털금융 혁신 및 안정 위한 금융규제 개선

-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소비자 접근성, 편리성)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 자본시장 선진화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 회사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 조정
 -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개선
 - 회계 및 공시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 기초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 전 과정 개편, 제재 실효성 강화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 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벤처기업 상장 유인
 -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강화

-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
 -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 추진
-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책임 강화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감원 분쟁조정위 독립성 강화,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

2. 시사점

디지털금융 혁신 위한 규제 개선: 디지털금융 관련 금융규제 개선은 금융규제 환경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규제 변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주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고 발생시 제재 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권 업무범위 확대: 예대마진에 대한 통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금융관행 개선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각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보호: 분할 후 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매도 사태 등으로 주주 보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담당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각사 내규 점검,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대책 제도화에 따라, 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분할 및 신규투자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면서도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건설

1. 주요 공약사항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1/3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 임대인 손실분, 세액공제 형태로 전액 보전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 보장

- 공공임대주택 양적/질적 확충
 - 건설임대 중심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씩 50만호 공급

◆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 국민 주거수준 제고
 - 공공택지 단계적 추가개발 고려
- 5년 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 도심지역/역세권/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 차량기지 및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 복합/입체화 개발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방지 위해 국토부장관이 작성, 고시
- 사업성 낮은 지역에 대한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정부는 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성 검토 과정에 민간참여 확대
 -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위한 특별법 제정,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통해 용적률 높이는 등 체계적 재정비사업 추진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 및 보완 장치 마련 통해 임대차 시장 왜곡 시정,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 민간 배정 택지 물량 일부 민간임대주택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

2. 시사점

새 정부의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임대차3법 개정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당선인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이중 수도권은 최대 150만호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1기 신도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중점적으로 주택공급이 되도록 하며,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민간중심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및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의 공급도 공약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사업추진, 공급량 확대 등의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및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건설업과 도심지, 역세권역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주택개발사업 및 건설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 해결됨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 및 부동산개발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심지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분야도 관심 있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에너지

1. 주요 공약사항

◆ 청정에너지 탑3 기술강국 실현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 집중 육성
 -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 4차산업 기술과 연계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에너지 벤처 활성화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업 육성

◆ 탄소중립 적극 추진

-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 조정

◆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탈원전정책 폐기,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조화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원전 기술력 복원
-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검토
-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및 원전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 원전 산업체계 개편방안 마련,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 수립

-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 10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적극 개발

- 수냉각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SMR 시장 선점
- 수소병합 원전 개발 및 수출 상품화
-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 SMR 개발

2. 시사점

탄소중립, 국가 NDC 달성 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 중점 육성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계획, 탄소배출저감계획 등 정책들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함께 원자력과 연계한 이른바 ‘핑크수소’ 생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상

1. 주요 공약사항

◆ 디지털 통상전략 강화로 통상환경 변화 대응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추진
-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뉴프론티어(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협력 확대
 -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 추후 정식 가입 모색

◆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 추진, 인도/대양주 지역으로 외교 지평 확대
 - 한/아세안 ABCD 전략 추진 등
- 유럽국가들과 국제규범 확립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 협력 대폭 확대
-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자원/에너지 공급망 확보, 교역/소비시장 확대 및 신규 개발 수요 발굴

◆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

- 원천기술 최다 보유국(미국/일본/유럽) 과 협력체제 구축
 - 미국과 경제/안보 2+2회의,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외교, 경제장관) 회의 추진
- 중국과 고위급 전략대화, 외교장관 회의, 차관급 전략대화 등 활용 전략물자 수급 협의 활성화
- 쿼트(Quad)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
- 역내 주요 무역협정(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지원
- 국가 정상 간 ‘경제전략대화’ 활성화
 -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 투자 및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및 고위급 전담 특사제도 운영
- 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 추진

◆ 기술통상 통한 산업경쟁력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 기술통상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경제-안보 연계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 서비스산업 통상협상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유도

2. 시사점

새 정부는 미·중 대립 시대에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의 통상관계 구축**에 중점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과의 통상·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 주도의 다자통상체제(CPTPP, IPEF) 가입을 추진하며, 쿼트(Quad)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쿼트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과는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소극적 접근이 예상됩니다.

이는 대미협조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형사

1. 주요 공약사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앱 실명 인증 강화
-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 흉악범죄 방지책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 설치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중형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감경 폐지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신고 방치 또는 회유 관리자 처벌 규정 마련
-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 무고죄 엄벌, 거짓말 범죄 피해자 위한 특별 구제책 마련

- 무고죄 법정형 강화 및 위증죄 처벌 강화
-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가칭)’ 설치

◆ 법무부, 공수처 등 개혁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검찰청 예산 편성 분리
-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 공수처법 독소 조항 폐지, 유사시 공수처 폐지
 -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허용

- 검경 수사권 조정 보완
- 가정법원 및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 통합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확대 개편

2. 시사점

5대 폭력범죄: 형사법 분야에서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내용의 공약이 제시되었습니다. ‘5대 폭력범죄’는 최근 다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전자감시센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 등 기관 신설과 ‘치유지원 제도 신설’, ‘스토킹피해자 신변보호 국가책임제 시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전자감독제 강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14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등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관 신설 및 제도 개선 등 공약이행 과정에서 법무부, 경찰, 지자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관련: 공수처 및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고 검찰 수사권이 약화되어 있는 현행 수사구조를 변경하여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도 제시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며,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수사구조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및 검찰의 경찰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 검사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 부족 등이 강조될 경우,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당선인과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 현행 수사구조 이전의 상황으로 상당 부분 되돌리자는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 정권 초기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일선 기업의 경제범죄 및 반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1. 주요 공약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국외사업장 폐쇄 후 3년내(현행 2년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시 세제 지원

◆ 벤처기업 우수한 인력 충원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 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 상장 유인

◆ 자본시장 선진화

-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상향

◆ 부동산 세제 관련

- 부동산세제 전반 정상화 방안
 -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 부동산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 위해 세율 1~3%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순

-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형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 허용
 -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를 상향

2. 시사점

조세 분야 공약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세제 면에서 뒷받침**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세대를 걸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국내로 생산시설을 복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복지 강화: 당선인은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청년,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 지난 정부가 주택 임대와 보유, 양도 등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왜곡과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선인은 부동산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설치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세제개편: 한편,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인 상장법인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과세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세제 면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1. 주요 공약사항

◆ ‘코인’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先정비/後과세 원칙)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부터 시작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구축

◆ 메타버스 지원

-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
 - 가상-현실 간 융합 활성화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로 국민 편의성 증대
 -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
 - 가상화폐의 국내 ICO 전면 허용(IEO 거래소 개설 후)
 -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강화
- 미래 일자리 창출 위한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소외 방지책 마련
 - ICO허용 및 해외거래 가능 상품의 국내 출시/거래 허용, 규제샌드박스 확대

◆ K-컬처 스타트업 지원

- 민간 콘텐츠업체 NFT 시장 활성화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지원

2. 시사점

가상화폐 관련: '17.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사업의 진출 역시 보수적으로 이뤄져왔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체계가 수립되고 제도화된다면 금융기관의 투자 및 관련 사업 진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CO 제도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확보되고, P2E 게임이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가상자산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입법전략자문팀] - 입법전략자문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장대섭 | 고문 T. 02-316-4639 E. dsjang@shinkim.com

[기업자문M&A그룹] - 기업지배구조

- 이동건 | 파트너변호사 T. 02-316-4297 E. tglee@shinkim.com

[노동그룹] - 노동(중대재해)

- 기영석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21 E. ysgi@shinkim.com

[공정거래그룹] - 공정거래

- 박주영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692 E. jyoungpark@shinkim.com

[ICT그룹] - ICT

- 강신욱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규제그룹] - 헬스케어 / 자동차·모빌리티 / 환경 / 소비재·유통 / ESG

- 이용우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07 E. ywlee@shinkim.com

[금융그룹] - 금융

- 황호석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74 E. hshwang@shinkim.com

[부동산대체투자그룹] - 부동산·건설

- 이석 | 파트너변호사 T. 02-316-1620 E. slee@shinkim.com

[프로젝트에너지그룹] - 프로젝트·에너지

- 이상현 | 파트너변호사 T. 02-316-4068 E. shlee@shinkim.com

[국제분쟁그룹] - 국제통상

- 김두식 | 대표변호사 T. 02-316-4223 E. dskim@shinkim.com

[형사그룹] - 형사

- 이건주 | 파트너변호사 T. 02-316-4211 E. kjlee@shinkim.com

[조세그룹] - 조세

- 조춘 | 파트너변호사 T. 02-316-4213 E. c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